

환경오염피해, 신속·공정하게 구제합니다

■ 편집부

지난 7월 19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 환경처산하 중앙환경분쟁위원회는 사법재판에만 의존했던 환경분쟁문제에 대해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를 구제할 목적으로 발족했다.

이미 첫번째 고객으로, 폐놀오염사건과 관련된 두산전자가 대구지방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제출, 보상금 1백 58억원에 대해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나섰다 한다.

“중전에는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었기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됐지만, 본 위원회는 사실조사 뿐만 아니라 피해입증책임까지 맡아 피해원인을 규명해주는 기구입니다.”

초대위원장으로 기용된 趙炳桓위원장은 중앙환경분쟁위원회의 설치배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따라서 앞으로 대기·수질·소음공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은 재판받지않고도 지방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최대한의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는 정부기관인 위원회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어떻게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와 관련, “위원회는 별도의 직제를 가진 독립된 상설기구로서 위원장과 비상임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비상임위원 6명 모두가 법조, 의학, 환경분야의 전문인들이기 때문에 공정성과 전문성은 확보되었다.”고 설명했다.

초위원장은 지난 '77년 미국웨인주립대학에서



환경공학박사를 취득한후, '80년 환경청 발족당시부터 수질·대기보전국장을 비롯 부산·광주·서울지방환경청장을 역임하는 등 이론과 경험을 겸비한 환경통이다.

“쌍방의 주장과 의견을 청취함에 있어 그 어느 쪽도 결코 소홀함없이 다루어 공정한 해결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의견이 상충되는 중대사건의 경우, 필요하다면 심사관과 함께 현장조사에도 직접 나설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